

FIA, 한국대회 포함은 협상용? ... 전남도 “개최 사실상 불가능”

<국제자동차연맹>

기रो에 선 영암 F1대회

불가능한 여건·일정 알고도
6개월 앞두고 한국개최 발표

FOM 계약위반 카드 꺼낼뻔
최악 국제소송전 치단을 수도
이낙연지사 향후 대응 주목

2015년 F1 경기 일정

개최일	개최지
3월 15일	호주
3월 29일	말레이시아
4월 12일	중국
4월 19일	바레인
5월 3일	한국
5월 10일	스페인
5월 24일	모나코
6월 7일	캐나다
6월 21일	오스트리아
7월 5일	영국
7월 19일	독일
8월 26일	헝가리
8월 23일	벨기에
9월 6일	이탈리아
9월 20일	싱가포르
9월 27일	일본
10월 11일	러시아
10월 25일	미국
11월 1일	멕시코
11월 15일	브라질
11월 29일	아부다비

2015년 대회 무산이 예상됐던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시즌 일정에 포함되면서 전남도가 진위를 파악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일정과 여건 속에 전남도는 대회 주관사인 FOM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애초 지난 9월 잠정 개최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지난 11월 초 전남도가 FOM 사무실을 방문해 내년 대회 개최 불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통과정 없이 갑자기 일정에 넣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FIA 이사회 “F1 코리아그랑프리 5월 3일 개최 예정”=국제자동차연맹(FIA) 이사회는 지난 3일 밤(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대회를 포함한 2015년 F1 시즌 일정을 확정했다.〈표 참조〉 2015년 F1 시즌은 총 21라운드(경기)로, 3월15일 호주 첫 경기를 시작으로 한국 대회는 5라운드인 5월3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종 승인 보류를 의미하는 TBC(To Be Confirmed) 단어가 붙어있어 ‘확정’은 아니다. 대회 주관사인 FOM과 추가 협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6라운드 스페인 대회가 5월10일 개최하기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일정 자체가 ‘협상용’이라는 주장도 있다. 로이터 통신 역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기가 실제 성사될지에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FOM은 한국 대회 일정과 관련해 전남도의 F1조직위와 논의하거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전남도 “내년 개최 사실상 불가능,



영암군 삼호읍 F1 경주장의 서킷이 4일 인가에 싸여 있다. 내년도 F1대회 일정에 한국이 포함됐지만 대회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후 협상”=2015년 대회를 영암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9일까지 F1조직위가 FOM측에 영국의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해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남도는 내년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00억원 가량의 대회 개최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50명 가량이던 F1조직위 인력도 9명으로 대폭 줄여 마케팅, 타이틀스폰서 유치 등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FOM측도 알고 있었다.

지난달 초 전남도의 F1조직위 관계자들이 FOM을 방문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

장과 현재 여건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당시 FOM측은 ‘계약 위반’이라는 원칙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남도와 FOM측의 협상은 내년 개최 여부보다는 2016년 개최, 또는 계약 연장 등을 놓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전남지사 향후 대응에 주목=F1 대회 개최로 인해 지난 2010년 715억원, 2011년 610억원, 2012년 386억원, 2013년 180억원 등 누적적자가 19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시민단체가 F1 대회 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이낙연 전남지사도 이러한 적자구조 개선을 대회 재계의 전제로 삼고 있다.

지난 10월15일 민선 6기 첫 도정 질문에 이 지사는 “F1대회를 지속하려면 적자구조 개선이 큰 숙제이고, 중단하려면 운영사 측과의 분쟁이 우려된다”며 2016년 대회 재개 검토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F1대회를 둘러싸고 외부 환경 변화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4차례 대회를 치르는 동안 큰 힘이 됐던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피로감이 어느정도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단 F1조직위는 FOM측에 전남도 안팎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며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FOM이 개최 입장을 고수하

며 계약위반 카드를 꺼낼 경우 국제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국제소송이 발생하면 계약서상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F1조직위는 현재 법인 자산이 많지 않고 전남도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FOM이 실익이 없는 소송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조직위 관계자는 “FOM이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FI 대회 조직위 자본금이 5000만원 밖에 안 돼 실익이 없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與 전전공공野 파상공세...정국 뒤흔든 ‘정윤희 문건’ 파문

‘정윤희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야당은 인책론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 박근혜)계와 친이(친 이명박)계가 다른 반응을 보이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4일 이번 사건을 정윤희 씨 등 ‘문고리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이번 일에 연루된 측근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 친박·친이 분열 조짐

새정치 대통령 책임론 제기

박대통령 일정 비운채 고심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는 문서가 유출된 게 국기문란이라고 하지만 이 문건이 비서실정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 비선들의 국정농단이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당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진 뒤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혹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머물렀던 야당이 보다 적극적인 ‘액션’에 들어가

는 모양새다.

여권의 내부 기류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사흘째 공식석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요구 등 야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만큼 최대한 이번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당내 계파에 따라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과 대응 기류도 엇갈리는 형국이다.

친박 주류는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를 상당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친박 주류 측에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침묵을 지켜온

친이계는 서서히 기지를 켜는 모습이다.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친박 주류 측에 대한 비판의 불륨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 아직은 관련자 사퇴 요구 등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고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 친이계 인사는 “아직 정권이 2년 차도 안 됐는데 이런 여초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서 “아마추어” 같다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청와대에 머물렀다. 청와대는 11~12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악화일로인 상황을 점검하며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부 “문화전당 재정은 지원, 운영은 법인에”

국회 특별법 논의...‘국가기관화’ 박해자 의원 발의안과 상충

정부가 내년 9월 개관을 앞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동의하지만,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국가 소속 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4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법인화를 주장하는 정부 개정안과 정부소속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박해자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정

부와 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안이 발의된 지 15개월, 박 의원이 발의된 지 11개월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박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서울대학교 법원과 법을 근거로 포함시킨 27조의 2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위탁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위가 국가소속기관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앞으로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해야하겠지만, 운영주체는 반드시 국가기관 소속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신용대출, 상가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